

# 광주시 ‘행정복합청사’ · 전남도 ‘경제산업청사’로

## 광주전남특별시 초광역 메가시티로 비상

“청사는 어디로 갑니까?” 전국적으로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될 때마다 통합 대상 자치구 주민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다. ‘청사 위치’는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청사를 유지하는 곳은 행정 중심지라는 위상과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지만, 청사 이전지는 도심 공동화와 인구 유출이라는 후유증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에 있던 전남도청이 남악으로 이전하면서 광주시 동구가 극심한 침체를 겪은 게 대표적이다.

타 시도도 예외는 아니어서 오는 7월 통합 출범을 앞둔 대구·경북은 청사 위치를 놓고 대구, 안동, 포항 간의 줄다리기가 막판까지 이어지며 진통을 겪었다.

갈등 원인 제거 ‘실용주의’ 해법  
현 청사 유지로 소모적 논쟁 차단  
‘미래혁신청사’ ‘글로벌도약청사’  
스마트 행정 인프라 연결 시급

반면, 후발주자였지만 무서운 속도로 치고 나간 대전·충남은 기존 청사 기능을 존중하면서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유연한 모델을 통해 갈등 비용을 최소화했다.

대전·충남이 단기간에 통합의 9부 능선을 넘으며 수도권을 위협하는 ‘제2수도권’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유연함에 있었다.

일단, 광주시와 전남도도 이 난제를 ‘실용주의’로 정면 돌파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기존 사도

청사를 그대로 존치하며 통합 광역 지방 정부의 청사로 활용한다”는 대원칙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청사 위치를 둘러싼 소모적인 지역 갈등을 원천 봉쇄하고, 건물의 위치보다는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가’라는 통합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제 과제는 ‘어떻게 나누느냐’다.

전문가들은 대전·충남의 속도전과 대구·경북의 진통을 교훈 삼아, 광주·전남만의 ‘기능적 화학 결합’을 주문한다. 핵심은 지역 특성에 맞춘 과감한 기능 재배치다.

우선 광주 서구의 현 광주시 청사는 ‘행정복합청사(가칭)’로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대도시 인프라가 필요한 도시 행정,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와 함께 AI(인공지능) 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것이 효율적이다. 도심형 서비스와 첨단 산업의 두뇌 역할을 광주 청사가 담당하는 셈이다.

무안에 있는 현 전남도 청사는 ‘경제산업청사(가

칭)’로 탈바꿈해야 한다.

전남의 강점인 에너지, 해양 수산, 농생명 산업과 국토 균형 발전 업무를 전담하여 현장 밀착형 행정을 구현하는 것이다.

특히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재생에너지 100%) 달성을 위한 에너지 산업의 심장부는 전남 청사가 되어야 한다.

청사 기능 배분은 행정 중복을 없애고, 민원인들이 자신의 응무에 맞는 청사를 명확히 찾을 수 있게 돕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시도지사, 지역국회의원과 간담회에서 “청사 소재지는 그대로 두되, 기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특화하는 것이 국가 균형 발전 취지에도 부합한다”며 힘을 실어준 바 있다.

청사 명칭 또한 탈권위가 필요하다. ‘1청사’, ‘2청사’라는 이름은 서열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처럼 ‘상무청사’, ‘무안청사’ 또는 김영록 도지사의 제안인 ‘미래혁신청사’, ‘글로벌도약청사’ 등 소재지나 비전을 담은 명칭을 부

여해 수평적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더불어 물리적으로 떨어진 두 청사를 하나처럼 연결할 ‘스마트 행정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통합 광주·전남은 메타버스 회의실, 클라우드 기반 통합 업무 시스템을 도입해 물리적 거리를 ‘0’으로 만들어야 한다. 공무원들이 결재 서류를 들고 고속도로를 오가는 비효율은 통합 시대에 용납될 수 없다.

조직 구성에서는 ‘광주·전남형 특례’가 필수적이다. 대구·경북이 국가직 차관급 부시장 2명을 포함한 4명의 부단체장 체제를 설계한 것을 참고하되, 광주·전남은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광대한 행정 구역과 농어촌 및 대도시 행정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 위해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하고, 실·국 설치의 자율권을 확보해야 한다. 중앙정부의 획일적 기준이 아닌, 우리 지역에 필요한 ‘해상풍력국’, ‘이민청유치본부’, ‘AI반도체국’ 등을 자유롭게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이 통합의 핵심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교육감 “통합 협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을 비롯한 양 교육청 관계자들이 12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청 간담회’를 마친 뒤 공동 발표문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며 상호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전남 교육행정통합추진단’ 구성

광주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다.  
이러 행정통합 과정에서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육자치의 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통합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며, 지역 발전의 주역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양 교육청은 교육행정 통합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기 위해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함께 교육통합을 이루기 위해 모인 이 자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이 될 것

으로 생각한다”며 “광주·전남 교육가족과 교육 구성원이 인사상 불안 없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는 교육통합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아이들의 미래와 희망을 위해서도 통합을 통한 대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광주와 전남은 본래 하나의 뿌리이며, 더 큰 광주·전남이 우리 아이들에게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줄 것이라 희망을 함께 키워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이날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을 선출하는 문제나 러닝메이트 도입 등 선출 방식 변경을 포함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민주 전남도당 결의대회 “통합 환영” 12일 무안군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결의대회가 열려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환영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 광주·전남 정치권, 행정통합 힘 보탠다

지역 정치권이 광주·전남 행정대통합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2일 제2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당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산업위기와 농어촌 소멸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호남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대적 선택”이라며 “대규모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전략 산업 및 기업 유치 등 국가 차원의 집중적이고 파격적인 지원 약속은 전남과 광

주가 하나의 미래 공동체로 나아갈 때 가능한 역사적 기회”라고 평가했다.

도당은 결의문을 통해 광주·전남 통합 광역단체장 선거 실시, 전남·광주 통합 추진 적극 찬성, 전남도의회와 광주시의회의 의결권 존중 및 주민 의견 수렴 보장, 공정한 통합, 현행 청사 유지와 행정·재정·권한의 균형 있는 운영, 통합 지원 특별법 제정,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강조했다.

전남도당 상무위원회가 만장일치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당론으로 의결함에 따라 통합 절차 중 하나인 ‘전남도의회 의견 청취’ 역시 긍정적인 결과가 예측된다.

전남도의회는 13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의 행정통합 관련 간담회를 가진 후 도의회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광주지역 5개 자치구의회도 행정통합을 위해 광주시와 손을 맞잡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동·서·남·북·광산구의회 의장들과 ‘광주·전남 대통합 성공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광주시의회도 이날 오전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의회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시의회는 행정통합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함유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 소비자상담실 : 080-234-6588

그린  알로에